

---

#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2020. 9. 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순 서

I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1
II . 경제·재정운용 여건 .....	2
III . 2020~2024년 재정운용 방향 .....	6
IV .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10
V . 재정혁신 방향 .....	13
[참 고]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22



---

## I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 ☐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
  - '04년 최초 수립('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
- 
-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 
- 분야별 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운영,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19.10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19년말)
  - \*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20.1월말)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0.5.25)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20.7.20)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20.8.4)
-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20.8.25)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0.9.3)

## II. 경제·재정운용 여건

### 1 대내외 경제 여건

#### 세계경제

□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

○ 하반기에는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와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상반기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부터 완만한 회복 예상

- 중국의 경우 여타 국가 보다 먼저 확산·소강을 경험하면서 2/4분기에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반등

\* 中 성장률(전년동기비, %) : ('19.1/4)6.4 (2/4)6.2 (3/4)6.0 (4/4)6.0 ('20.1/4)△6.8 (2/4)3.2

○ 다만, 신흥국 확산세 지속 및 미·유럽 등 선진국 재확산 추세 등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제약 우려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잠재

○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글로벌 이동성 회복, 이연수요 표출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 전망

- 신흥국도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 예상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주요국간 통상 갈등, 신흥국 경제불안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19	'20	'21
세 계	2.9	△4.9	5.4
- 선진국	1.7	△8.0	4.8
- 신흥국	3.7	△3.0	5.9

\* 출처 : World Economic Outlook(IMF, '20.6월)

## 국내경제

□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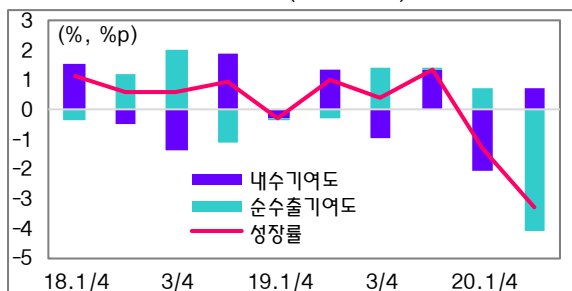
○ 하반기에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추경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 예상

- 다만, 최근 국내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및 글로벌 확산세 지속, 대규모 수해 발생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 고용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확충 노력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극심한 충격에서 점차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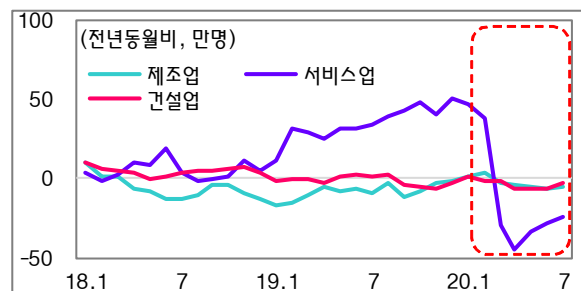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0.1/4)28.8 (4)△47.6 (5)△39.2 (6)△35.2 (7)△27.7

GDP 성장률(전기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자 증감



\* 자료 : 통계청

□ **(2021년 이후) 코로나19 진정 및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구조적 변화 대응 노력 강화 필요

○ 내수 등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세계 성장·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도 개선될 전망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IMF) : (성장)△4.9 → 5.4 (교역)△11.9 → 8.0

○ 다만,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도 가속화 예상

\* 비대면·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저탄소·친환경경제 요구 증대, 양극화 심화 우려 등

## 재정수입

- 코로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재정수입(총수입)이 당초 '19~'23년 계획 상의 예측 경로에 상당수준 미달할 전망
  - (국세수입) '20~'21년 증가폭 둔화에 따라 이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19~'23년 계획에 못 미칠 전망
  - (세외수입)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19~'23년 계획 대비 감소 전망
    - 다만,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수입 전망은 다소 유동적
  - (기금수입)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추세 감안시 '19~'23년 계획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 유지 전망

## 재정지출

- 코로나19 이후 경제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성과 확산,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 등을 위한 지출소요 확대 전망
  -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 투자소요 증가
    -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등 12개 디지털 뉴딜 과제와 그린 리모델링·친환경 모빌리티 등 8개 그린 뉴딜 과제 본격 추진



- (혁신성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 반도체)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소요 확대
- (경제활력)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소비·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필요
- (포용기반)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소요 증가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 (인구변화) 보육·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과 노인 보건 의료·노후소득기반 확충 등 고령화 대비 투자소요 증가
- (국민안전) 자연·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생활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소요 확대
  - 감염병 전문병원·인력 확충,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 확보, 백신·치료제 R&D 확대 등 감염병 방역시스템 고도화 지원 등

'19~'23년 계획 대비 '20~'24년 부처요구

(단위 : 조원, %)

구분	'19	'20	'21	'22	'23	'24	증가율
▪ '19~'23년 계획(A)	469.6	513.5	546.8	575.3	604.0		6.5
▪ '20~'24년 부처요구(B)*		512.3	579.4	620.3	648.0	685.3	7.5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32.6	45.0	44.0		

\*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20.1월말)

### Ⅲ. 2020~2024년 재정운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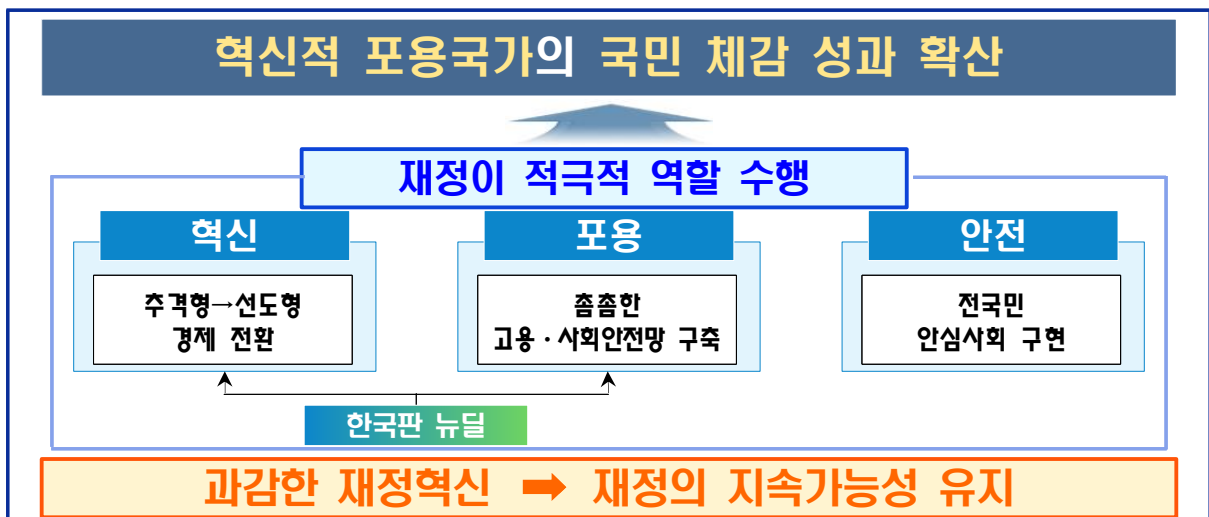
####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

- (혁신)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경제역동성 회복
- (포용)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포용기반 확충
- (안전) 자연·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튼튼한 국방 및 한반도 평화경제기반 조성 등을 통해 전국민 안심사회 구현

□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을 핵심사업에 재배분하고 부처간 협업예산 활성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 성과관리체계 개편으로 전략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국가계약·조달제도 혁신 등을 통해 공정·혁신 가치 확산
- 과세기반 확대, 세외수입 확충, 국유재산 활용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원 확충 및 다변화 노력 지속 추진



## 재정수입

□ 재정수입(총수입)은 '20~'24년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증가폭이 둔화되어,

- 이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전망

○ 세외수입·기금수입은 연평균 2.0%, 5.0% 수준 증가할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81.8	470.7	483.0	505.4	527.8	552.2	3.5
○ 국세수입	292.0	279.7	282.8	296.5	310.1	325.5	2.8
○ 세외수입	27.9	29.1	28.6	28.9	29.9	30.2	2.0
○ 기금수입	161.9	161.9	171.6	180.0	187.8	196.6	5.0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 조세부담률은 '20·'21년 하락한 이후 완만하게 증가 전망

<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단위 :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조세부담률	19.3	18.7	18.8	18.9	19.0
▣ 국민부담률	27.2	26.6	26.7	27.0	27.3

\* 3차 추경 기준

## 재정지출

- 재정지출(총지출)은 '20~'24년 기간 중 연평균 5.7% 증가할 전망
  - 경제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 성과 확산 등을 위해 '21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의무지출은 '20~'24년 기간 중 연평균 5.3% 증가
  -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
- 재량지출은 '20~'24년 기간 중 연평균 6.2% 증가

###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총지출	512.3	546.9	555.8	589.1	615.7	640.3	5.7
(증가율)	(9.1)	(16.5)	(8.5)	(6.0)	(4.5)	(4.0)	
○ 의무지출	255.6	255.1	267.3	282.5	295.7	314.2	5.3
(비중)	(49.9)	(46.7)	(48.1)	(48.0)	(48.0)	(49.1)	
○ 재량지출	256.6	291.8	288.5	306.6	320.0	326.1	6.2
(비중)	(50.1)	(53.3)	(51.9)	(52.0)	(52.0)	(50.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확대로 '24년 관리재정수지는  $\Delta 5\%$  중반 수준 예상

- '23년까지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Delta 5\%$  후반 수준으로 확대되나,  
- '24년에는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관리하여 수지적자 비율을  $\Delta 5\%$  중반 수준까지 축소

※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4년 기준 GDP 대비  $\Delta 3.9\%$  수준으로 관리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사보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수지

□ (국가채무) GDP 대비 채무비율 증가 속도(폭)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24년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 노력

###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Delta 71.5$	$\Delta 111.5$	$\Delta 109.7$	$\Delta 123.2$	$\Delta 128.2$	$\Delta 127.5$
(GDP대비, %)	( $\Delta 3.5$ )	( $\Delta 5.8$ )	( $\Delta 5.4$ )	( $\Delta 5.9$ )	( $\Delta 5.9$ )	( $\Delta 5.6$ )
※ 통합재정수지	$\Delta 30.5$	$\Delta 76.2$	$\Delta 72.8$	$\Delta 83.7$	$\Delta 87.9$	$\Delta 88.1$
(GDP대비, %)	( $\Delta 1.5$ )	( $\Delta 3.9$ )	( $\Delta 3.6$ )	( $\Delta 4.0$ )	( $\Delta 4.0$ )	( $\Delta 3.9$ )
▣ 국가채무	805.2	839.4	945.0	1,070.3	1,196.3	1,327.0
(GDP대비, %)	(39.8)	(43.5)	(46.7)	(50.9)	(54.6)	(58.3)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 IV.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 복지·고용분야 투자 확대 추진
- ◇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해 R&D·산업·중기분야 적극 지원
- ◇ 교육·농림분야 등은 중점지원 및 내실화 부문을 균형있게 고려

### 1 사회 분야

-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강화
  -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
    - 유사·중복, 저성과 사업, 한시적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재투자하여 일자리 예산의 성과 제고 도모
  - (복지) 저소득·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서비스 및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 돌봄·보육, 노후 소득보장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투자 확대
  - (환경)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등 그린뉴딜 집중 투자 및 환경산업 기반조성
    - 수질개선시설 등 환경인프라 투자는 신·증설에서 안전·개량 중심으로 전환
  - (교육) 학령인구 감소,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연령대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
    - 국립대 육성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간 연계·조정을 검토하고, 장학금, 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 교육·주거비 경감노력 지속
  - (문화·체육·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초 문화·체육생활기반 확대

## 2

## 경제 분야

-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 동력 확충
  - (산업·중기·에너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벤처·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 전략 육성
    -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비
  - (SOC) 노후화에 따라 SOC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생활SOC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및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 확대
    - 도로, 철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시 수익자부담, 지자체 책임성 강화 원칙에 입각해 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방안 모색
  - (농림·수산)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농어업 확산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착 적극 지원
    - 농업 생산기반시설은 재해예방·완공소요 중심 적정 투자로 전환
  - (R&D)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D·N·A\*, BIG3\*\*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R&D 투자 확대
    -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 3

## 행정 분야

-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통해 국방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한 국민안전 투자 확대
  - (국방) 병역자원 감소,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증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군 육성, 첨단무기체계 개발·도입 집중 투자
  - (외교·통일)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다자외교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한반도 평화경제기반 확충 지원
  - (일반·지방행정) 스마트 행정구현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투자를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 지원 강화
  - (안전) 신종감염병, 산업재해 등 안전 위해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2020~2024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총 지출 (증가율)	512.3 (9.1)	555.8 (8.5)	589.1 (6.0)	615.7 (4.5)	640.3 (4.0)	(5.7)
1. 보건·복지·고용	180.5 (12.1)	199.9 (10.7)	217.4 (8.8)	230.2 (5.9)	242.7 (5.4)	(7.7)
2. 교육	72.6 (2.8)	71.0 (△2.2)	74.2 (4.4)	75.4 (1.6)	77.9 (3.4)	(1.8)
3. 문화·체육·관광	8.0 (10.6)	8.4 (5.1)	8.8 (4.7)	9.2 (4.0)	9.4 (3.0)	(4.2)
4. 환경	9.0 (21.8)	10.5 (16.7)	11.4 (8.3)	12.1 (6.1)	12.6 (4.0)	(8.7)
5. R&D	24.2 (18.0)	27.2 (12.3)	29.1 (6.9)	30.7 (5.4)	32.0 (4.3)	(7.2)
6. 산업·中企·에너지	23.7 (26.4)	29.1 (22.9)	32.3 (10.9)	34.2 (5.8)	35.6 (4.0)	(10.7)
7. SOC	23.2 (17.6)	26.0 (11.9)	27.8 (6.8)	28.7 (3.4)	29.3 (2.0)	(6.0)
8. 농림·수산·식품	21.5 (7.4)	22.4 (4.0)	23.0 (2.7)	23.3 (1.3)	23.5 (1.1)	(2.3)
9. 국방	50.2 (7.4)	52.9 (5.5)	56.1 (6.0)	58.6 (4.5)	60.9 (4.0)	(5.0)
10. 외교·통일	5.5 (8.8)	5.7 (4.3)	6.0 (4.0)	6.2 (4.0)	6.5 (3.9)	(4.1)
11. 공공질서·안전	20.8 (3.5)	21.8 (4.4)	22.8 (4.8)	23.7 (4.1)	24.6 (3.4)	(4.2)
12. 일반·지방행정	79.0 (3.2)	86.5 (9.5)	87.6 (1.3)	92.0 (5.0)	94.9 (3.2)	(4.7)



---

## V. 재정혁신 방향

---

### 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

#### 지출 구조조정

---

-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
  - 관행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노력도 확대
    -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보조금 수급관리 인프라 확충\*\* 등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 \*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강화
  - \*\* 통합수급자격검증시스템 구축 등
-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

---

## 지출구조 개선

---

-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 노력 지속 추진

\*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등

-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주기와 예산 순기간 일치, 이행점검 강화 등 추진

- 인구·사회·산업 구조 변화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

---

## 협업예산 활성화

---

- 부처간 연계·협력이 긴요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예산 확대 추진

-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주기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정비, 국민체감도 향상 등 재정투자 성과 제고

- 전문적 분업형·사업주기별 협력형·수요자 맞춤형 등 유형별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재정 전반으로 확산

- 우수 협업과제는 필요 소요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비과세·감면 정비

-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 성과평가 내실화 등을 통한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
-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 중심으로 정비 방안 적극 검토
-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 조세지출 판단기준 보완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지속 보완

## 탈루소득 과세 강화

- 역외탈세 과세 및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관리 강화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의 국내 입법 및 보완 지속 추진
-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 체납액 납부 촉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 재원의 효율적 활용

---

- 칸막이식 재정운용방식에서 벗어나 회계·기금간 여유재원 조정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기금별 여유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회계 전출 등을 포함한 회계·기금간 여유재원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
- 소규모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맞춤형 통합운용 지원을 통해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자산배분전략 수립, 투자의사 결정,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 전주기를 연기금투자쪽에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

### 3 투자자원 다변화

---

---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필수기반시설 조기 확보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원
  -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한국형 뉴딜' 등의 새로운 유형\* 사업에 민자방식 적용 검토

\* '포괄주의' 도입('20.3월 민투법 개정)으로 민자 추진가능 대상시설 확대  
(종전) 도로·철도·항만 등 53개 유형 → (변경)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 및 공용·공공용시설

- 세제혜택, 규제완화, 사업참여 우대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의 민자사업 투자 유도
- 민간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 동시 진행 등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기간 단축

---

## 국유재산 활용 확대

---

-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도모
  -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및 생활 SOC를 확충하고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도 지속 추진
    - \* 청·관사 + 수익시설 + 공공임대주택
  - 유휴 행정재산 및 국유재산 특례 관리를 강화\*하고,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 특례 운영의 기본원칙 확립 및 일몰제·존치평가 도입(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4 재정위험 관리 체계화

---



---

###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

- 장래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추세 등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 전망 결과를 토대로 연금·보험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 재정준칙 및 보완지표 도입 등을 통해 재정위험의 체계적 관리 강화

-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 검토
- 재정상황과 국민부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등 보완지표 도입 검토

---

## 국고채 안정적 관리

---

□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시장상황에 맞춰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국고채 수요기반 강화 노력도 지속 추진

- 대·내외 경제상황, 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별·연물별 국고채 발행물량 적정 배분
- 국고채 전문딜러 인수여력 보장\* 및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국채 인수실적을 중심으로 PD평가 강화, PD 비경쟁인수 확대 등

□ 미래 차환위험 및 시장변동성에 대한 효율적 관리 노력 강화

- 적정 수준의 조기상환 실시, 중·장기물 발행 등을 통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분산함으로써 미래 차환리스크 축소
- 주기적 교환을 통해 국채 유동성 제고 및 시장거래 활성화
-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토대로 필요시 적기 시장안정조치 시행

## 성과관리제도 개편

-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 성과계획서·보고서 관리대상을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성과관리의 거시적·전략적 기능 강화
  - 제도별 평가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평가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평가결과와 예산편성간 연계는 강화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 체계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재정성과DB 구축 등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추진

## 국가자산 종합관리체계 구축

- 국가채권·증권·토지·건물 등을 포괄하는 국가자산 개념 정립
  - 국가자산 정의와 연계하여 현재 관리 공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제도적 관리기반 마련
  - \*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 관리기능 강화
  - 차세대 dBrain 구축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등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 과징금 출자전환 미등재 등 개별부처 관리 소홀 → 국유증권 관리 일원화
  - 국유재산 특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자산 손실 최소화
  - \* 국유재산 특례 신설 시 사전심사, 특례 일몰제도 도입 등 총량 관리 강화

---

##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추진

---

□ 혁신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구매를 통해 민간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개선

○ 패스트트랙 I·II\* 지정을 지속 추진하여 혁신제품의 풀(pool)을 넓히는 한편, 패스트트랙III\*\*를 신설하여 혁신제품 범위 추가 확대

\* (FT1/FT2) 정부R&D성과물/상용화前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지정

\*\* (FT3) 신기술·신제품(NET·NEP),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기술마켓 제품 중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분명한 제품 및 그밖에 지정 필요성 인정 제품 등을 지정

○ 혁신구매목표제\*를 기관평가에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조달 본격 추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

\*\* 혁신조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출범

---

## 공공계약제도 개선

---

□ 공공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계약 절차의 효율성·공정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도모

○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TF」 운영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제도의 유연화·절차 간소화 추진\*

\* (공정성) 공기연장 시 간접비 지급 회피 금지,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등  
(효율성) 카탈로그계약 도입, 신기술 인증제품 수의계약 기간 완화 등

□ 혁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 강화

○ 新산업에 특화된 계약제도 도입\*,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혁신기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최적화된 계약제도 신설, 기술·콘텐츠 평가 강화 등



##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개 확대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정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위한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추진
    - 차세대 dBrain을 통해 중앙·지방·교육 3대 재정시스템 및 공공기관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국가 재정정보의 통합관리 기반 마련
    -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국가 전체 재정정보와 산재된 수혜자 재정정보\*를 「열린재정」에서 **One-Stop**으로 맞춤형 공개
- \* 복지로(복지서비스), 나라도움(보조금), 정부24(공공서비스), 교육지원한눈에(교육) 등

## 국민참여예산제도 정착 · 확산

- 예산국민참여단의 역할 강화 및 연간 상시운영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대면숙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예산국민참여단 운영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참여 규모도 확대\*
- \* ('19년) 4백명 → ('20년 이후) 2,000여명
- 상시 제안접수, 토론 이슈 확대 및 국민 대상 이슈 선정투표 진행 등 참여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정책제안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제안·예산편성·집행 단계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
- \* 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등 정책제안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 중 참여예산 사업 발굴 추진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2년까지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속 확대
    - \* '21년 노인, 한부모 가구→ '22년 그 외 가구 대상 폐지(고소득·고재산가 제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 현실화 등 주거급여 개선,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 신설 등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추진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촘촘한 보육·돌봄 인프라 구축 및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공공보육·초등돌봄\* 강화 등을 통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신혼부부·청년 공적임대주택 확대 지속 추진
    - \* 공공보육 40% 달성('22), 초등돌봄 아동 53만명 달성('17년 33 → '22년 53만)
  - 기초연금 확대(소득하위 70% 전체, 25→30만원), 디지털돌봄 시범 사업 도입 등 노인 소득기반 및 돌봄지원 강화
- 장애인 및 소외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복지 포용성 강화
  -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근로참여 등을 통해 장애인 3대 애로요인(생계·일상생활·일자리) 경감
    - \* (장애인연금) '19년 기초수급 → '20년 차상위 → '21년 소득하위 70% 전체
  - 확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대 및 쉼터폐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신설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보건산업 육성 지원
  -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를 지원하고 지역밀착형 협력체계, 의료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 강화
    - \* (예) 사전예방(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진단치료(호흡기전담 클리닉,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 데이터중심병원·스마트병원 등 바이오-ICT융합을 촉진하고, 제약·의료기기·뷰티 분야 인프라·인재양성 투자\*로 가시적 성과 창출
    - \* (예)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건립, K-뷰티 피부유전체 분석, 한국형 NIBRT 본격화 등

## 【참 고】 일자리 분야 중점 투자방향

-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
  - 두루누리사업의 기존 가입자 지원은 종료하고,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신규 적용자 위주로 지원
  -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 대상 구직급여 신규 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생활안정 지원
- \* 구직 촉진수당 및 상담·직업훈련·일경험 연계 등을 통해 구직 지원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 및 고용서비스 질(質) 제고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 및 공공·민간훈련기관 인프라 개선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 유턴기업 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고용 장려금 지원
  - 고용센터 인력 보강 및 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질 제고
- 산업현장 안전 확보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미인증 고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공정 개선, 사업장 산재 예방시설 교체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전 도모
  -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사업주 지원 확대로 근로환경 개선 유도

## [2] 교육 분야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인재 양성
  - 대학 혁신을 통한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지역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지자체-대학 협력 플랫폼 구축
  - 디지털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고,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에도 공개
-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강화
  - 노후 학교건물을 그린스마트 스쿨(친환경+디지털)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진단시스템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 직업교육 - 선취업 - 후진학 성장경로 확립으로 고졸인재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 확대
  -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연장하고, 고교 무상교육(20년 고2·3→21년 소학년)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출발선 보장
  - 대학생 근로장학금·후진학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
  - 화재·전도위험 외벽 교체, 석면제거, 내진보강, 노후시설 보수 투자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대학 수준의 학습이 가능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대 추진
  - 학생·연구자가 365일, 24시간 학술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 DB 구독 지원 확대
  - 저소득층·문해교육 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 VR·AR 기반 실감콘텐츠 및 OTT 등 新유형 디지털콘텐츠 제작,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도입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
  - K-pop·게임·영화 등 핵심 문화콘텐츠 분야 집중 육성
-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신한류(新韓流) 진흥·확산
  - 전통문화·예술·스포츠 등 우리문화 쏠 영역에서 다양한 한류 콘텐츠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 소비재·서비스 산업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을 위한 연계행사·협력마케팅 등 추진
- 소외·취약계층 대상 문화 향유기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상향('20년 9만원→'21년 10만원)하고,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용품 지원 등도 확대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
  - 지역관광거점도시(광역 1개, 기초 4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 해외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한 교통·숙박·볼거리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관광벤처기업 지원 등 관광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활력 제고
-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 확대
  - 여성·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2032하계올림픽 유치 등 차질없는 국제대회 유치·준비 지원

#### [4] R&D 분야

- 관리품목 확대 등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촉진을 위한 투자 강화
  - 기존 **100대** 품목의 자립화 및 공급 안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관리품목 확대(100개 → 338개)
  -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 신소재, AI·에너지·바이오 등 첨단 유망 소재·부품 개발도 적극 추진
-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강화
  - D·N·A\*, BIG3\*\*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R&D 지속 투자
    -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 D·N·A기반 정보보안,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유망 신기술 R&D 투자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적극 뒷받침
  - 제로 에너지화, 생태 복원, 저탄소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녹색산업 기술 R&D 투자 확대
- 지속가능한 국가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 및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등에 집중 투자
  -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R&D 중심으로 쏠주기적 지원(기술개발→임상·실증→제품화)
- 기초·원천연구,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
  - 미래 과학기술역량 및 우수인력 성장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내실화 및 지원 확대
  - AI·SW, BIG3 등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고급인재 양성 및 수준 향상을 위한 혁신인재 인프라 투자 확대

##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무역금융 보장,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해외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총력지원
  - 바이오·로봇·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화·실증 등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하여 제조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 스마트 산단,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등 인프라 지원 확대
  -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및 특구 입주 기업 대상 **R&D**, 사업화, 인프라 지원 강화
-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사업화·인프라 지원 강화
  -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 벤처시장 마중물 공급 지속
  - 비대면·디지털, **BIG3** 등 유망분야 전용 창업사업화 패키지 확충 및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TIPS** 지원 확대
  - 창업기업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파크 등 구축 지원
-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스마트 혁신 지원 강화
  - 지역신보 보증 확대 및 재해·위기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스마트 혁신을 위한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슈퍼 보급 및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 대폭 확대
- 신재생에너지·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및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
  -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등 태양광에너지 확산 및 아직 초기 단계인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R&D**·입지 등 지원
  - 수소 생산기지 구축,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등 생산-유통-안전 주기별로 지원이 시급한 핵심 인프라 중점 구축
  -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및 노후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원



## [6] SOC 분야

### □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및 주요 간선망 지속 투자

-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출퇴근 편리성 증진 등을 위해 GTX·진접선 등 광역철도망, 광역·혼잡도로 확충
  - 삼성역 복합환승센터('27년) 등 핵심 거점에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세종-안성 고속도로('24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25년) 등 국가 주요 기간망 확충

###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총 25.4조원, '19.1월) 적기 완료 지원

- \* (도로) 제2 경춘국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울산 외곽순환도로, 국도 위험구간 등 7개 (철도) 남부내륙철도, 동해선 전철화,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철도 등 8개
- 설계, 착공 등 **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차질 없는 준공 지원

\* ['21년 진행단계] (도로: 7개) 설계 4, 착공 3 (철도: 8개) 설계 7, 착공 1

### □ 노후 SOC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 위험도로, 노후 교량·터널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매년 5조원 내외** 투자

### □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SOC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주요 SOC 분야에 IoT 계측기,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 등 **스마트화\*** 촉진

\* '22년까지 소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설치, 재해 高 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510개소) 등



##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 농어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

- 농지보전·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 공익형 직불제 안착 도모
-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 부채농가 경영희생지원 지속 확대
- 농어민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어촌뉴딜 300사업 등 도시민의 휴양·관광 수요도 충족하는 열린 농어촌 개발 추진

\* 어촌뉴딜 300(개소, 누적): ('19) 70 → ('20) 190 → ('21) 250 → ('22) 300

### □ 농산물 가격안정 및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와 의무자조금 단체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플랫폼 지원

### □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지속

- 스마트농어업 확산·고도화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지원하고 청년 전문인력도 육성
-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 및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 □ 재해예방 및 한국판 뉴딜 소요 중심으로 농업 SOC 적정 투자

- 신규 수리시설 설치의 속도를 조절하되,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중심으로 농업 SOC 투자 강화
- 농업용 저수지 원격수문제어 시스템 구축, 수질관리 자동화, 제방 붕괴 사전 계측 등 SOC 디지털 투자 확대

\* 물관리 자동화율 : ('21) 67% → ('25) 100%

\*\* 붕괴 사전계측기 설치(누적, 3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  
: ('20) 30 ('21) 200 ('29) 960개소 완료

## [8] 환경 분야

-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환경·경제 가치 창출
  - 미세먼지·먹는물·기후변화 등의 재정투자 및 기준 강화가 관련 산업 성장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확대
  - 녹색기술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을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 일자리 창출
-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여 국민 체감 성과 제고
  - 산업·발전 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수송부문은 중대형 경유차를 저공해화하는 등 배출 기여율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
  -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규제강화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사업 확대
  - 과학적 측정·분석 및 촘촘한 배출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지속가능성 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감축 사업 추진 및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지역·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 폐기물의 생산·소비 단계 원천적 감량, 재활용 시장·산업 활성화, 처리단계 공공 안전망 강화 등 자원순환성 제고
-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 및 생태서비스 혜택 확대
  - 도시·도시외 지역의 생태축 복원 및 연결성 강화,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용량 향상
  - 취약계층 무장애 탐방 인프라 확충, 고지대 보호 및 저지대 탐방문화 촉진 등 계층·연령·지역별 맞춤형 생태서비스 제공

## [9] 국방 분야

### □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

#### ○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를 위한 감시·정찰 전력 확보

\* 군 정찰위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항공통제기(2차) 착수

#### ○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핵심 전력 보강

\* 대형수송함-Ⅱ, 공지통신무전기, 드론봇 체계 등 군구조 개편 전력 중점 반영

#### ○ 실효적 우주역량 기반 강화 및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고도화

\*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개발, 군위성통신체계-Ⅱ(양산) 착수

#### ○ 핵·WMD 대응능력 확보로 안정적 전작권 전환 환경 구축

\* 보라매사업,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Ⅱ 본격 추진

#### ○ 신규 무기체계 후속지원 강화로 현존전력 운용능력 극대화

### □ 군 구조 정예화 및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 강군 구현

#### ○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인력 및 부대구조 정예화

#### ○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운영 및 교육훈련 확대

### □ 안전하고 건설적인 국방환경 조성

#### ○ 병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 병장기준 ('20) 54.1만원 → ('21) 60.9만원 → ('22) 67.6만원으로 인상 계획

#### ○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장병자기개발 지원 확대

#### ○ 노후 조립식 생활관을 개선하고 침상구조의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

## [10] 외교·통일 분야

- 핵심 외교정책 기조 지속 지원 및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실현
  -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4강 등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신남방 등 신흥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외교지평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소통과 참여의 공공외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비대면 디지털 외교 인프라 확대·강화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활동 강화, 사건사고 인력확충 등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지속 확대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21.1.16. 시행 예정
- 보건 분야·신남북방·융합프로그램 등 국익을 위한 전략적 ODA 확대
  - 기업 등 민간기관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 강화 및 글로벌 방역 선도국 위상 확립을 위한 보건 ODA 투자 확대
  -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원국 중심으로 ODA를 지속 확대하여 동반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 \* 신남방 : 아세안+인도, 신북방 : 몽골+중앙아시아
- 동일 프로젝트에 여러 부처가 협업·연계하는 융합예산 발굴을 지속 확대하여 ODA 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 강화
- \* 융합예산 분야: ①인프라구축(EDCF)+사후관리, ②시스템개선+기술지원, ③정책자문(KSP)+실증지원
- 남북관계의 복원·발전 및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확산
  -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인도적 협력, 작은 교역 등을 시작으로 남북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 \* 보건의료·재난재해·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분야를 발굴·추진하면서, 철도·도로 등 합의사항 이행 추진
- DMZ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을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고,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생 협력 확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통일 정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활성화

##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호 강화
  - 학대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채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확대
  - 수용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및 출소자 취업 지원 확대
- 정신질환 범죄자 및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및 전자감독 확대를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 정신질환자 및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
  - 재범위험성이 높은 과거 전력자에 대한 1:1전담 전자감독과 보석·가석방된 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및 디지털·성 범죄 등 신종 범죄 대응 수사 장비 등 보강
  -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장비를 확충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장비 보강 등 지원 강화
- 재해 예방투자·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 종류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대형·복합재난 대비 소방장비 등 확충

##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청년 자립마을 전국 확대, 지역거점형 공동협력공간 조성 등 수요자 중심의 지역 정착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소비 등 경기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디지털 기업 중심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통해 생활방역 등 지역 일자리 수요에 대응
- 서해 5도, 접경권,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특수상황 및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지역발전 추진
  - 법정 중장기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
- 디지털 정부혁신 및 스마트 정부 구현 적극 추진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전·전환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 및 민간수요 뒷받침
  - 정부업무 혁신을 위해 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참여 플랫폼 다양화·활성화 촉진
- 민주화 기념사업 및 과거사 정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책임있는 국가 구현
  - 주요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과거사 관련 조사 및 인식 제고, 트라우마 치유 등 지속 추진

## 【별 첨】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분 야	지 표	'20년	'24년
보건·복지 · 고용	▪ 생계급여 수급자수(만명)	127	153+α
	▪ 기초연금 수급자수(만명)	568.8	696.2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개)	-	3
	▪ 지역간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배)	1.27 (‘18년)	1.23
교 육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8	40
	▪ 고교무상교육 대상 학생(만명)	86	124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동, 누적)	-	2,302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천명, 누적)	38	56
문화·체육 · 관광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조원)	129.1	162.3
	▪ 국내관광 총량(억 일(日))	4.4	6.7
R&D	▪ 4차 산업혁명 R&D(조원)	2.1	2.5
	▪ 중소기업 전용 R&D(조원)	2.3	2.4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조원)	2.0	2.8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 스마트상점 구축 개소수(개, 누적)	6천	9만
	▪ 고압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개, 누적)	40만	500만

분 야	지 표	'20년	'24년
SOC	▪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km)	4천	14천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동, 누적)	-	2,170
	▪ 수소도시 기반구축(지자체수)	3	6
농림·수산 · 식품	▪ 농업 저수지 관리 자동화율(전국 93개 권역, %)	71	89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ha)	93	530
환 경	▪ 전기차 보급(천대, 누적)	170	847
	▪ 수소차 충전소(개소, 누적)	39	340
	▪ 초미세먼지 국내배출량 감축률(%) * 대책 기준년도인 '14년 배출량 기준	12.5	35.8 이상
국 방	▪ 전력운영비 중 후속군수지원 비중(%)	10.4	12.0
	▪ 방위력개선비 국내투자비율(%)	72.9	82.4
외교·통일	▪ 재외국민보호제도 만족도(점)	76.0	77.0
공공질서 · 안전	▪ 교정시설 과밀수용률(%)	110.7	100.0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개소, 누적)	20	80
일반· 지방행정	▪ 공공데이터 개방(만개, 누적)	9.8	14.2
	▪ 청년 자립마을(개)	3	15